

금·비트코인 고공행진

러-우 확전 우려에 ‘금 랠리’… “내년말 2900달러 가능성”

(트로이온스당)

푸틴,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
단기투자 자금, 안전자산 이동
“금 수요 증가 당분간 이어질 것”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확산 우려로 안전자산인 금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서울 종로구 한국 금거래소에 전시된 골드바. /뉴시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이후 상승세가 꺾였던 금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미국·영국산 미사일이 사용된 데 이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쟁 위기감이 ‘안전자산’인 금의 수요를 끌어올렸다.

24일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지난 22일 트로이온스당 2712.2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이는 전일보다 37.30달러(1.39%) 상승한 가격으로, 국제 금은 5일 연속 상승해 지난 5일(현지시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간 거래로도 지난 2023년 3월 이후 가장 빠른 상승이다.

이번 금 가격 상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핵무기를 동원할 수

있다는 러시아의 위협에 안전자산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영국은 각각 지난 19일과 20일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에 미국산·영국산 전술 탄도미사일 공격에 나섰고, 지난 21일 러시아는 핵탄두 탑재가 가

능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사용해 반격에 나섰다.

또한 같은 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자국을 공격했다면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핵 교리 수정안’에도 서명했다.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핵무

기’ 카드를 꺼내들면서 전쟁 위기감이 커졌다

전쟁 위기감 고조로 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미 대선 직후 7% 가까이 내렸던 금 가격은 하락을 대부분만 회하며 ‘금 랠리’를 재개했다.

앞서 금 가격은 올들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하락 전망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는 ‘금 랠리’를 이어갔다.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30일에는 연초(2073.40달러) 대비 35% 가까이 상승한 온스당 2800.8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어 지난 5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고, 함께 치러진 미 상·하원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레드 스윕’이 현실화해 금 가격 상승에는 제동이 걸렸다.

‘연방정부 재정 확대’, ‘관세 인상’ 등 트럼프가 내걸었던 공약에 따라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지난 5일 2749.70

달러였던 금 가격은 15일 2570.10달러까지 내렸다.

전쟁 위기감으로 금 가격 상승이 재개되면서, 전문가들은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금 수요 증가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귀금속 거래소 엘리지언스 골드 오브의 알렉스 엡카리안 최고운영책임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충돌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에 따라 단기 투자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UBS 파이낸셜 서비스의 솔리타 마르첼리 최고투자책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위험 회피 수단으로 금의 역할이 늘고 있다”며 “정부 부채 수준 증가 등 정치적 압력에 대한 위험 회피 선호도 고려하면, 금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 가격이 2025년 말까지 트로이온스당 29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트럼프 2기, 친가상화폐 인사 포진… 비트코인 열기 고조

가상자산 전담 보좌관직 신설 검토
“10만 달러 시간문제… 20만도 가능”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신고점을 돌파하는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빙셀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첫 10만 달러 돌파를 앞두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가상자산에 친화적 규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여기에 가상화폐에 보수적인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까지 사임을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의 열기는 더 높아지고 있다.

24일 가상자산 시장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9만8600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2일 9만9000달러 돌파 후 차익매물 실현으로 9만700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전일 새벽 한때 9만9655달러까지 치솟으면서 장중 최고가를 또 다시 경

신했다.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것은 강도 높은 규제로 가상자산 업계를 압박했던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사임이다.

SEC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성명

을 통해 “겐슬러 위원장이 내년 1월 20일(현지시간) 사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겐슬러 위원장도 X(옛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책임을 맡겨준 데 대해 감사했다”며 “SEC는 사명감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법을 집행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1년 SEC 수장을 맡은 겐슬러는 그간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단속과 강한 규제를 추진해온 인물이었다. 오는 2026년까지 임기를 남겨 두고 있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관례대로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가상화폐 업계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겐슬러를 해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차기 SEC 위원장 후보로는 댄 겐러거 로빈후드 최고법률책임자와 크리스 지안카를로 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과 헤스트 피어스현 SEC 위원 등 친(親)가상화폐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 위원회가 백악관 내 가상자산 정책을

전담하는 보좌관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직책은 일명 ‘가상화폐 차르’로서 연방정부의 가상화폐 관련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미국 대통령은 물론 타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상자산 규제 완화로 투자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우호적이라며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비트코인 10만달러 돌파가 기간문제라는 분석이다.

미국 웰스트리트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현재 10만 달러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제프 켄드릭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이 연말까지 10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며 “최대 12만5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지난해 비급여 진료적자 2조 육박… 서울 등 과잉진료 의심

4세대 실손보험 위험손해율 118%
서울지역, 타 지역대비 진료비 높아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진료 현황: 염좌 및 긴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염좌 및 긴장 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보험 환자의 진료비 중위값은 26만4000원, 비급여 진료비는 1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비수도권 지역의 진료비 22만5000원과 비급여 진료비 9만10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상위 25% 기준으로는 서울에서 치료 받은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34만8000원으로 경기지역 20만원, 비수도권 28만2000원보다 높

았다.

또한 4세대 실손보험 환자들 가운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 중위값은 각각 28만1076원, 12만9600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24만980원, 10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진료 받은 환자들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상위 25%에 속하는 환자의 비중은 4세대 실손보험 환자가 38%로 의원 16% 보다 높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경선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종별 기준으로 병원, 그리고 서울지역의 경우 과잉진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비급여 관리방안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비급여 관리를 위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을 높이고 보험료 할인·할증을 강화하고 있으나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실손보험으로 인한 비급여 진료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위험손해율은 118%, 적자 규모는 2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보험금은 지난 2022년 7조

8587억원에서 2023년 8조126억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4세대의 경우 앞선 세대의 실손보험 대비 자기부담비율을 상향하고 보험료 할인·할증을 반영했으나 손해율은 지속 악화하고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지난 2021년 61.2%에서 2023년 115.9%로 상승했다.

전 선임연구위원과 김 연구위원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관리 취지는 제한적으로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